

★★★★★ 진단 - 복수조합원제의 엿짐 ★★★★★

농협서도 여성농민 차별하나

조합원 참여 기대 좌초위기, 여성농민 조직적 항의 전개

복수조합원제 실시로 '이제는 나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했던 여성농민들의 기대가 좌초위기에 몰려있다.

지난 94년 12월 개정돼 오는 6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가운데 복수조합원제가 추가되는 1인의 조합원에 대해 연령과 직계비속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농민의 조합원 참여의 길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애초 복수조합원제 논의가 물위로 떠오른 것은 이농인구가 늘면서 과잉된 조합원 감소, 조합원의 고령화문제에 부딪힌 농협의 지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기반 강화와 사업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복수조합원제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문화개방의 원칙', 즉 원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1가구 2인으로 못박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3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유순)이 개최한 '복수조합원제의 올바른 시행방안' 공청회에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은실(전여농 대외협력위원장) 씨는 "오늘의 농업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농업구조에서 벗어난 지 오래며, 극심한 농가경제의 파탄과 이에 따른 이농, 농업인구의 노령화, 후

계인력의 고갈 등으로 가구주 1인(남성) 중심의 농업생산, 생활의 영역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농협은 여성농민을 포함해 향후 농업후계인력을 적극적으로 계발해야 하며 복수조합원제 시행에 따라 현재 8.3%에 머물고 있는

여성조합원을 전체 조합원의 30%선까지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고 씨는 대의원, 감사, 이사 등 조합임원에 여성이 단 한사람도 없다면서 이의 개선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 씨는 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조합원제가 추가되는 1인에 대해 직계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하고 있어 젊은 영농후계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규정이 남성 중심인 농촌 현실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현재 조합원이 시아버지 외 아들이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으며, 젊은 영농부부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 한하고 있어 여성농민인 아내에게 돌아올 조합원 몫이 없다는 것이다.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여성농민의 조합원화는 '새로운 바람'으로 인식돼 있다.

고 씨는 이부분에서 "만일 농협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관제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여성은 과부가 아닌 이상 조합원이 되기 힘들 것"이라 꼬집기도 했다.

배려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또 이명진(농림수산부 농업금융과) 사무관도 "여성농민을 조합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제도적 할당은 어렵다"고 밝히고 "부부

대책위 구성, 농협장 직접 면담 요구 조합원 기대는 54%, 현재는 8.3%

반면 이런 지적에 대해 주무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농업과 친화력이 높은 여성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공청회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일 농협 부너지도과장은 "복수조합원제는 젊은 영농후계자에 조합원 자격을 확대할 필요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 말하고 여성농민에 대한

가 업종을 달리하는 농가나 젊은 농가주부모임 등을 통해 여성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복수조합원제 시행에 앞서 각 주무기관이 여성농민에 대한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청회를 통해 복수조합원제의 구체적 내용이 전해지자 여성농민들은 참여 보장을 요

구하는 조직적인 항의를 전개하고 있다.

농협이 정한 정관제를 각 단위조합이 검토한 후 자체적으로 정관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협 정관제가 원안대로 통과되는 판례를 볼 때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의 정관제를 검토하기 전에 자신들의 요구

를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에 이미 3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보냈지만 여성농민의 조합참여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하는 김현숙(전여농 사무국장) 씨는 "복수조합원제가 현재 1가구 1조합원제와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자 여성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농협중앙회 회장을 직접 면담해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전여농은 '농협 복수조합원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여성농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여성농민들과 농협조합원 가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발족선언문에서 ▲ 여성조합원 30% 이

상 확보 ▲ 농협은 복수조합원제 시행과 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 ▲ 농협은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정수를 확대해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할 것 ▲ 여성대의원 할당제와 여성농민 직능별 이사회를 도입해 여성농민 관련 사업은 여성이사가 담당하도록 할 것 ▲ 여성농민에 대한 영농기술 확대, 경제협동사업의 활성화, 여성농민 복지사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정관제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여농은 복수조합원제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대적인 정관개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여농은 농협과 농림수산부에 복수조합원제가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내 여성조합원은 93년 말 현재 1백95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16만여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이며 대부분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알려졌다. 또 농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의 53.6%, 후계농민의 63.1%가 조합원 가입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막걸리 한잔이면 그만'이었던 여성농민의 조합원 참여는 농촌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손정미 기자)

여농, 지자체 10대 공약 발표

30% 할당제, 영농기술교육, 탁아소 설치 요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유순)은 지난 1일 지방자치시대 여성농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농촌지역 후보들이 적극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여농이 채택한 여성농민 10대 정책과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작목별, 분야별 전문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여성농민의 농민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0%에도 못미치는 농협조합원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영농후계자 선정시 현 0.4%에 머물고 있는 여성농민에게 30% 지분을 배정해야 한다.

3.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 속에서 농업인구와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를 위해 60일간의 출산수당을 시·군 예산에서 책정해야 한다.

4. 도시와 농촌간 의료시설과 인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단위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보건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5. 농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국공립 탁아소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6. 농촌지역 현실에 맞는 형태의 학교급식을 중고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

7.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단위 1개 이상의 우수 중, 고교 육성과 소규모학교에 대한 특별지원책이 필요하다.

8. 농촌지역 마을마다 공동분리 쓰레기 수거장 설치와 함께 쓰레기 수거체계를 농촌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농촌지역 상하수도 설치의 전면확대와 상수도수를 불소화하는 등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9. 면·군단위로 복지, 문화센터를 설립해 농어촌지역의 낙후한 문화, 복지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10. 여성농민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업, 농촌관련 각종위원회에 여성농민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의회 내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농민 담당부서를 설치해 전문화해야 한다.



공청회서 분노한 여성농민들

이삭줍기

농림수산부·농협 관계자
훈계조·농담 등 무성의로 일관

지난달 31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린 전국여성농민회(회장 강유순) 주최 공청회는 여성농민을 보는 관료들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더도 덜도 없이 보여주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농업 관련 대표적인 기관의 담당자들과 갖는 첫 공청회라 여성농민회가 안고 있던 부담과는 대조적으로 농림수산부와 농협에서 파견된 두 대표는 시종일관 훈계와 농담을 번갈아 구사했다.

여성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고 묻는 한 질문에 농림수산부 농업금융과 이명진 사무관은 "같은 질문 여러번 되풀이하지 말고 한번 말할 때 잘 들어라"라는 어이없는 훈계를 시작으로 "농협법 개정 작업시 농협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질문의 의도와 거리가 먼 답변을 했다.

이어 복수조합원제의 구체적 실행방향이 무엇이라는 질문과 농협과 단위농협 조합원간에 공식적인 논의구조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임동일 부너지도과장은 농협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는 책임도 없는지 "내가 농촌 부너지들과 친하다"는 등 중간중간 농담을 하며 실무자들의 간단한 보고만 내세우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실무자의 답변은 난데없이 여성참정권의 역사에 대한 강의로 대체됐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자 공청회에 참석한 한 남성은 "토론자가 이렇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공청회는 처음 봤다"며 "여성농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런 답변을 하는가"고 분개했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그랬다는 변명이 있었지만 농번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몇시간을 달려온 여성농민들은 주무 기관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쓸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밖에서는 한낱 '아녀자'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 여성농민. 이들은 영원한 봉인가.